

19대 대선과 함께
박근혜 정부 퇴진!

진보 성향 투표 무려 2백만 표 이상!



대중이 변화를 염원하다. 변화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19대 대선 결과와
과제

3~4면

새 정부가 직면할 이슈

- 성과연봉제 문제 5면
- 전교조·공무원노조 인정 5면
- 세월호 참사 문제 6~7면

- 사드 배치 철회 12면
- 여성의 조건 8면
- 이주민 정책 9면

옛 소련을 보고
러시아 혁명을
판단하면 안 된다

10~11면

서평
만화 러시아 혁명
《붉게 타오른 1917》

11면

무자비한 이윤 물이가 낳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2면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무자비한 이윤 물이가 36명의 사상자를 냈다

지난 5월 1일, 삼성중공업에서 6명이 죽고 25명이 부상을 당한 끔찍한 중대 재해가 벌어졌다. 부상자들 중 2명은 위독한 상태라고 한다.

사고는 선박 제조에 사용되는 대형 기중기 두 개(골리앗크레인과 지브크레인)가 충돌하면서 벌어졌다. 이 충돌로 지브크레인의 철골 구조물이 쓰러져 노동자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던 휴연실을 덮쳤다.

사측은 즉각 신호수와 운전자의 부주의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경찰도 이런 방향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사고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다.

일부 언론은 사고 당한 노동자들이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작업 공간에서 나와 쉬다가 변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아마 사측이 흘린 말이었을 텐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파렴치한 짓이다. 언론은 화장실·휴게실 부족으로 쉬는 시간마다 작업자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몰린다는 사실은 보도하지 않았다.

진정한 사고 원인은 사측의 이윤 물이에 있다. 조선업 위기 속에서 삼성중공업은 구조조정으로 인력 감축, 비용 절감에 매달리면서 노동자들을 위협으로 내몰아 왔다.

이번 사고 현장에는 5월까지 일을 끝내야 하는 해양플랜트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공사 지연으로 손해가 커질 것을 걱정한 사측은,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공사에 투입했고 쉬는 날도 없이 일을 시켰다. 참사가 일어난 5월 1일도 노동절 휴일이었지만 사내하청 노동자 1만 3천 명이 일했다.

공기 단축이 우선시되면서 안전은 무시되기 일쑤였다. 골리앗크레인이 지나가면 멈춰야 할 지브크레인은 멈추지 않았고, 쉬는 시간 10분 전에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멈춰야 할 크레인들이 모두 멈추지 않았다. 작업 속도를 올리기 위해 안전 장치들을 풀어 놓았거나 아예 안전 장치들을 설치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외주화가 확대되면서, 각각의 크레인을 움직인 조종수와 신호수들은 서로 다른 업체에 소속돼 긴밀하게 소통하기도 어려운 구조였다. 골리앗크레인은 원청의 정규직이 몰았고, 지브크레인은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이 몰았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말처럼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지난 3월에도 크레인 충돌 사고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안전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원가 절감

조선소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계열사에서만 13명이 숨졌다. 특히 이번 경우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변변찮은 안전 장비나 점검도 없이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고 있다. 고용불안 때문에 작업 속도를 높이려는 사측의 압력에도 더 취약하다. 해고·블랙리스트 위협 때문에 일하다 다쳐도 산재 처리는 엄두도 못 낸다. 2014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의 조사에 따르면, 산재 처리율은 단 3.7퍼센트에 그쳤다.

앞서 봤듯이, 조선업 구조조정은 이

런 위협을 부채질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1분기에만 2백75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는데, 사측은 “원가 절감”의 효과라고 말했다. 더 싼 값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부리고 안전 투자를 삭감하는 등의 일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정부도 규제 완화로 위협을 부추긴 당사자다.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구조조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건 것은 박근혜 정부였다. 국토교통부는 2007년에 규제를 완화해 공공기관이 하던 타워크레인 정기검사를 민간업체들에 넘겨 버렸다. 이후 크레인 사고는 더 늘어났다.

이번에도 정부는 안전 점검이 끝나

기도 전에 부분적으로 작업 중지를 풀어 줬다. 수십 명의 생명과 건강을 앗아간 사고 속에서도 사측의 돈벌이를 보장하는 데 급급했던 것이다.

이번 참사에 분노한 경남·거제·울산·부산의 노동조합과 진보·좌파 단체들이 모여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를 만들었다. 이들은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구속과 처벌, 유족 보상과 재발방지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끔찍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할 수 있도록 투쟁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김지태

광주 초등돌봄교사 투쟁

134명 해고하려다 67명 해고한 장휘국 ‘진보’ 교육감

서지에 전교조 조합원

초등돌봄전담교사 1백34명에게 집단해고 갑질을 휘두르던 장휘국 광주 교육감에 맞선 투쟁이 마무리됐다. 투쟁 29째인 지난 5월 8일,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광주교육청은 그동안 “집단해고 철회와 전원 고용승계”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협상 시한(5월 8일)을 제시했다. 노동자들은 교육청 옥상 농성에 돌입하는 등 절박하게 싸웠으나 교육청은 전원 고용승계를 끝내 거부했다.

합의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경력자(절반에 해당하는 67명)만 필기 시험 없이 서류 전형과 면접을 통해 채용하고, 나머지 노동자들은 필기시험 등으로 공개채용을 거쳐야 한다. 반쪽짜리 승리인 셈이다. 그동안 싸워 온



비정규직 해고하는 “진보 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 67명을 해고했다

노동자들에게 매우 아쉬운 합의가 아닐 수 없다.

초등돌봄 사업은 상시 지속 업무다. 애초에 이런 업무는 질 좋은 돌봄을 위

해서도 정규직(적어도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했다.

그런데도 전교조 광주지부장까지 지낸 진보교육감인 장휘국 교육감이

노동자들을 소모품 정도로 여기며 쉽게 쓰고 버리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집단해고를 자행하고, 당연한 요구를 한 노동자들을 시험 경쟁에 몰아넣으며 비열한 갈라치기를 한 장휘국 교육감은 수많은 진보 염원 대중의 실망과 냉소를 자아낼 것이다. 또한, 진보 교육감이 전보다 못하다면 진보 교육감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근본적 물음을 던지게 할 것이다.

그동안 외주 위탁 시간제로 고용됐던 돌봄전담사 외에도 현재 광주의 학교 현장 곳곳에는 유치원 기간제 교사, 방과후 전담사, 영어전문회화강사 등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다. 장휘국 교육감은 아마도 이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용안정의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고, 자신의 지지기반을 배반하면서까지 전원 고용승

계를 거부한 듯하다.

이 투쟁을 함께해 온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사무처장은 이번 투쟁을 이렇게 평가했다.

“아쉬운 측면이 크다. 특히 노조 추천위원 출입도 막은 채 날치기로 집단해고와 신규공개채용 방침을 강행한 교육청 인사위원회를 막지 못한 점이 결정적이었다. 노동자들의 절규에도 6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쉽게 버리는 진보교육감을 보며, 새로운 개혁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우리는 큰 환상이 없다. 이 투쟁을 함께했던 동지들이 내린 답은 학교비정규직들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철폐하려면 학교 노동자들이 단결해 더 큰 투쟁을 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교훈을 되새기며 새 정부 하에서도 진보 교육감에 대한 독립적 관점을 견지하며 투쟁하자.

이렇게 생각한다 19대 대선 결과와 과제

우파, 1987년 이래 최저 득표 최대 표차로 패배

19대 대선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완전 퇴진해 지긋지긋한 우파의 10년 집권이 막을 내렸다.

민주당 후보 문재인이 1천3백42만여 표(41.08퍼센트)를 득표해 당선했다. 자유한국당 후보 홍준표는 7백85만여 표(24.03퍼센트)를 득표했다. 우파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처음 도입된 이래 최저 득표에 최대 표차(5백57만여 표)로 패배했다.

이번 대선 투표율은 77.2퍼센트로, 1997년 대선(80.7퍼센트) 이래 20년 만에 가장 높았다. 1997년은 36년 만에 일당국가가 무너지고 정권 교체가 이뤄진 해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하에서 벌어진 부패 스캔들,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청년 실업을 등 경제 불황 심화, 노동조건 악화, 사드 배치 등 친미 외교 정책, 북한 제재 강화 등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 등을 반대했다.

홍준표는 대중의 변화 염원을 정면으로 거슬렀다. 재벌 지원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을 때려잡고, 힘으로 평화를 지키겠다고 했다. 우파 표를 결집하겠다는 발상이었다.

우익 유권자들은 홍준표의 막장 발언에 환호했지만, 이 자는 보수 세력들로부터도 온전히 지지를 받지 못했다. 유승민은 홍준표를 “보수의 수처”라며 후보 단일화를 거부했다. 자유한국당으로 원내 복귀한 바른정당 의원

들은 여론의 못매를 맞았다. 물론 유승민의 ‘개혁적 보수’는 홍준표의 ‘수구 보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유승민은 확고한 신자유주의자이고 사드와 전술핵 배치를 찬성하는 강경 안보론자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는 ‘색깔론’도 맥을 못 쳤다. 사드 배치 논란, 북한 ‘주적’ 공방, 송민순 문건 등은 ‘안보 블랙홀’로 작용하지 못했다. 우파의 책략에 대한 불신이 강했기 때문이다. 일부 진보파들이 우파의 종북 물의를 지나치게 두려워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미 지난해 총선 때 울산북구에서도 우파 후보의 종북 물의를 노동자 유권자들이 가뽏나게 물리쳐 진보 후보가 당선했다.

결국 ‘나라를 팔아먹어도 35퍼센트 지지율은 지킨다’던 범우파 콘크리트 지지층은 깨지고 악화돼 우파는 선거에서 패배했다. 홍준표와 유승민의 지지율은 합해도 대략 30퍼센트였다.

우파의 선거 패배는 일찌감치 예견됐다. 촛불 운동의 타격을 받아 우파는 위축되고 자신감이 떨어져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패배감이 만연했다.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범우파 후보들이 명멸했다. 반기문은 우파의 기대를 받으며 등판했다 한 달도 못가 스스로 강판했다. 황교안은 막판까지 눈치 작전을 펴다 출마를 포기했다.



우파의 10년 집권을 끝낸 촛불 운동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정부의 당선 요인과 직면할 모순들

문재인은 촛불 운동이 일으킨 탄핵 태풍 덕분에 대통령이 됐다.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껌업 조사에서 문재인 의 지지율은 16퍼센트였다. 당시 1위는 반기문이었다(28퍼센트). 그 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박근혜 퇴진 운동이 분출하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반기문이 부패 추문 연루 의혹에 휩싸인 데다 정권 교체를 상징하는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신년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 80퍼센트가 정권 교체를 지지했다.

탄핵 찬성 정당 후보들의 대선 득표를 합계가 박근혜 탄핵 찬성률과 거의 일치한다. 탄핵 찬성률은 꾸준히 80퍼센트 가까이를 유지했다. 탄핵에 찬성한 네 정당 — 민주당 · 국민의당 · 정의당 · 바른정당 — 후보들의 득표율을 합하면 75.4퍼센트다. 그중 안철수와 유승민은 노동자들에게 진정한 정권 교체 후보로 여겨지지 않았다. 안철수는 오락가락하다 날개 없이 추락했다.(안철수가 애초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사이에 지지 기반을 놓으려 한 것 자체가 정치적 양극화 상황에 대한 물이해를 반영한다.) 유승민은 박근혜 탄핵을 찬성했어도 적폐 세력의 일부였다.

정의당의 심상성 후보는 아직 당선

가능한 후보로 여겨지지 않았다.(그럼에도 2백만 명 이상이 심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대중의 변화 열망을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정의당의 성적은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은 정권 교체를 이를 현실 가능한 후보로 문재인에 투표하는 것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다고 느꼈다.

뒤늦게야

문재인은 촛불 운동의 정치적 수혜자였지만, 처음에는 박근혜 정권을 지지하지 않았다. 대신에 박근혜 2선 후퇴와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했다.

11월 12일 민주노총이 주도해 1백만 명이 서울 도심에서 시위를 벌인 뒤인 11월 15일에야 비로소 문재인은 박근혜 퇴진을 처음 언급했다. 10월 29일 최초의 퇴진 운동이 일어난 지 무려 17일이 지난 뒤였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박근혜를 탄핵하기로 한 것은 12월 3일 무려 2백30만 명이 전국 주요 도시의 거리 시위에 나선 뒤인 12월 8일이었다. 더구나 철도 파업 종료를 전제로 한 결정이었다.

이때까지 아래로부터의 퇴진 운동

에 주도권을 빼앗겼던 민주당은 탄핵안 통과라는 의회 절차로 옮겨가면서 정치적 주도권을 쥐게 됐다.

촛불 운동에 대한 문재인 의 소심함이 문재인 의 “적폐 청산” 범위와 수준을 규정한다. 그의 “적폐 청산”에는 촛불 운동의 요구들이 거의 반영돼 있지 않다. 사실 많은 사안들에서 문재인은 2012년 대선 때보다 후퇴했다. 문재인이 보수 표를 얻고자 안철수와 우경화 경쟁을 하느라 더 그랬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진보 정부가 아니다. <조선일보>가 문재인 정부를 “진보 정권”이라고 부르는 것은 눈이 뻔 소치다. 어디를 봐서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와 천대받는 다른 사람들의 변화 염원을 대변하는 정부라는 말인가.

협치 또는 거버넌스

문재인이 집권에 성공했지만 그 정부 앞에는 심각한 구조적 모순들이 놓여 있다. 우선, 나쁜 경제 상황이 문재인 정부의 운신의 폭을 제약할 것이다. 가계 부채 급증, 높은 청년 실업, 실질 임금 하락 등으로 인한 대중의 불만이 상당하다. 그러나 기업주들은 이윤을 지키기 위해 노동계급을 공격하도록 문재인 정부를 압박할 것이다. 그래서 친민주당 개혁 언론인 <한겨레>은 ‘통



사진: 연합뉴스

“적폐 청산”의 문이나 “통합”의 문이나

합 정부는 선택이고 협치는 필수’라고 주문한다.

문재인도 당선하자마자 국민의당에 손을 내밀었다. “뿌리는 같은 정당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협력을 바란다.” 박지원도 협조 의사를 밝혔다. 심지어 박영선 통합정부추진위원장은 바른정당에도 손을 내밀려 한다. “바른정당에 소속된 의원이라도 개별적으로 개혁 아젠다에 동의하면 (내각에) 임명될 수 있다.”

이런 “협치”는 가뜰이나 불품없는 “적폐 청산”을 더 불품없게 만들 것이다. 결국 문재인은 ‘개혁 없는 개혁주의 정부’, ‘개혁을 도로 빼앗아가는 개혁주의 정부’가 될 것이다.(이 점은 <노

동자 연대> 신문이 그동안 누차 경고해 왔다.)

동아시아 긴장 고조 상황도 문재인 정부를 압박할 것이다. 문재인은 북한 핵 프로그램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트럼프를 상대해야 하고, 사드 배치 문제로 냉랭해진 중국과의 관계도 풀어야 한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친미적 자주”라는 모순된 말을 하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 결국 한국 지배계급의 전통적 외교 정책인 한미동맹 체제를 지지했다. 노무현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고, 한미FTA 협상을 시작했다.

▶ 4면으로 이어짐

▶ 3면에서 이어짐

심상정 후보, 최근 진보정당 역사상 최다 대선 득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사표 논리에 도 불구하고 무려 2백1만 7천4백58표(6.17퍼센트)를 득표했다. 진보 정당 최다 대선 득표다. 2002년 대선에서 권영길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가 얻은 95만 7천1백48표(3.9퍼센트)보다 갑절 이상으로 는 것이다.

선거 막바지에 심 후보의 인기가 치솟아 자못 기대치를 높였던 일부 정의당 지지자들은 실망감을 나타내는 듯하다. 그러나 홍준표가 문재인을 “친북 좌파”(!)라고 비난할 정도로 한국의 공식 정치 지형은 우경화돼 있다. 게다가 민주당은 “정의당 지지는 다음 선거에 해도 된다”며 ‘사표론’을 자극했다. 그런데도 2백만 명이 정의당에 투표한 것은 대중의 진보 염원이 강력함을 보여 준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우리 정의당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심 후보의 말이 더 현실에 부합해 보인다. 출구조사 결과가 10퍼센트에 미달하는 것으로 발표되자마자 3시간 30분 동안 4천 명이 1억 5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당에 보냈다.

민주노총이 평했듯이, 심 후보의 “약진”은 “진보정치의 지반을 크게 확장”했다.

촛불 운동이 매우 컸던 덕분에 정의당이 민주당 왼쪽에서 선거적 돌파구를 낼 수 있었다. 과거 대선들에서 진보·좌파 후보들은 악의적으로 무시당하거나 유력 후보들 보도 후에 “한편, 000 후보는 ~했다”는 식으로 지나가듯이 취급됐다. 그래서 “한편” 후보라는 자조 섞인 농담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언론들도 심 후보를 무시할 수 없었다.

“노동”을 앞세운 심 후보의 선거 성적은 진보·좌파 진영 내에서 유행하는 노동운동 고립론이나 진보 정치(정당) ‘위기론’이 기우이거나 착각임을 보여 준다.

정의당이 이번 대선에서 갑자기 부상한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노동자들이 조금씩 저항을 건설하면서 그 정치적 표현으로 정의당 지지가 늘었다. 그래서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정의당이 상당히 전진했다.

도약의 계기

퇴진 운동 과정에서도 정의당이 진보·좌파 가운데 가장 큰 득을 봤다. 그 탄력으로 심상정 후보가 “노동”을 강조하며 대선에 출마했다.

심상정 후보는 홍준표의 친시장 노동조합 적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와 동시에, 민주당의 어정쩡하고 소심한 중도 정치의 문제점을 파고들었다. 문재인이 증세 없는 복지를 폭로했다. 동성에 혐오감을 드러낸 문재인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바로 이런 점들이 심 후보의 인기를 치솟게 했다. 여론조사들에 따르면, 심 후보는 노동-20대-여성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있었다. 심 후보의 마지막 유세 주제도 청년과 노동이었다. ‘청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노동이 당당한 대한민국을 위해 거침없이 달려가자.’



“진보정치의 지반을 확장”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

정의당은 민주당 정부에 참여하지 말아야

노화찬 정의당 의원은 정의당사를 방문한 문재인에게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지도부는 협력의 매개 고리로 아마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염두에 두는 듯하다.

이것은 노동자 계급의 정치세력화에 다소 도움이 될 법들이다. 기성 정당들은 진보 정당의 원내 입성을 막으려고 이 법들의 도입에 미온적이다. 그러나 이것이 민주당과의 협력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문제일까?

이와 비슷한 상황이 2004년에 있었다. 당시 민주노동당은 총선에서 10석

을 획득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4대 개혁 입법’ 현실화를 위해 국회 내에서 열린우리당(민주당의 전신)과 동맹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열우당의 개혁 회피 시도에 침묵하거나 “열우당보다 딱 한 뼘 더 나가 있었을 뿐”(〈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23일치)이었다.

그러다 보니 “열우당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사람들에게 투표 동기를 부여하지 못했다. 그 결과 열우당-한나라당의 양당 정치체제를 오히려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심상정 후보가 민주당 정부와

공동 정부 구성 의사를 밝힌 것은 걱정스럽다. 정의당이 공동정부에 참여한다면 민주당의 하위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것이다. 민주당 정부는 머잖아 개혁 약속을 배신하고 노동자들을 공격할 것이다. 이때 정의당이 공동 정부에 참여하고 있다면 배신의 책임을 함께 지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정의당 지도부는 야권 공조에 스스로를 긴박해, 민주당·국민의당과 함께 철도 파업 종료를 종용한 바 있다. 정의당의 공동 정부 참여는 노동자 계급의 손발을 문재인 정부에 묶어 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을 막는 구실을 하

게 될 것이다.

“적폐 청산”과 개혁 입법 쟁취를 위한 유일하게 효과적인 방법은 문재인 정부에 환상을 갖지 않고 그에 철저하게 맞서 싸우는 것이다. 이런 한결같은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의 의식이 진보화하면 정의당이 성장할 가능성도 커진다. 반대로, 투쟁이 저조해 대다수 노동자들이 사기 저하되고 방향 감각을 잃게 된다면 정의당의 성장에도 부정적일 것이다.

정의당 좌파는 당 지도부의 공동정부 참여에 한사코 반대하며 당 밖에서 벌어지는 노동자들과 천대 받는 다른 사람들의 투쟁에 동참해야 한다.

공동전선을 이해하기

좌파는 개혁주의의 위기도 봐야 하지만 그 회복 능력에 대해 무지해서도 안 된다.

현대 자본주의의 상태가 개혁주의 노선의 핵심을 강타하면서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개혁주의가 성과를 거두는 전략이 되려면 개혁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장기 호황 동안에는 이런 조건이 충족됐다. 그때만 해도 개혁을 제공하는 개혁주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는 그렇지 못했다. 자본주의 국가를 인수해 사회를 개혁한다는 개혁주의 전략이 현실에서는 노동계급에게서 개혁을

회수해 갔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 운동의 자발적 이데올로기로서 개혁주의가 죽었다는 뜻은 아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은 흔히 노동조합의 협상이나 의회에 압박을 가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정치 운동으로서 개혁주의는 계속 존속할 수 있다.

경제 위기일지라도 개혁의 가능성이 원천 봉쇄된 것도 아니다. 유급휴일이 처음 입법화된 것은 대공황 때인 1936년이였다. 당시 프랑스에서 거대한 공장점거 파업들이 일어나 정부와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에게 양

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혁이나 혁명이나 하는 문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개혁을 위한 투쟁을 지지한다. 이 투쟁을 통해 체제 자체에 도전하는 데 필요한 동력을 모을 수 있다. 그러나 궁극으로 아래로부터의 대중 행동에 기반해 국가 권력에 도전하지 않고는 개혁을 지킬 수 없다. 1백여 년 전에 점진적 변화 전략을 제안한 베른슈타인에 맞서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 로자 룩셈부르크가 지적한 바다.

동력

이 전략에 따라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개혁주의 정당과 공동전선

전술들을 구사해야 한다. 개혁을 제공할 수 있는 체제의 ‘객관적’ 능력이 약화됐을 때조차 많은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전통적인 개혁주의 조직에 충실하고자 한다. 공동전선은 이런 개혁주의 정당 지지자들과 함께 공동 투쟁을 하고 대중적 입증을 위해 그 속에서 참을성 있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다.

노동자들이 개혁주의의 한계에 도전할 능력은 오직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성공할 때 생겨난다. 이런 성공이야말로 사회 변화의 동력이 노동자들의 자체 행동에 달려 있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

그러나 투쟁이 성공했다 해서 투



로자 룩셈부르크

사들이 자동으로 사회주의적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개혁주의 정당 지지자들과 공동 투쟁을 하면서도 근본적인 사회 변화에 관한 시각도 함께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문재인은 성과연봉제 폐기 공약 이행하라

이정원

산적한 노동 문제 중 성과연봉제 폐지는 새 정부의 노동 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이슈다.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인 성과연봉제는 노동자들의 상당한 저항에 부딪혔다. 2016년에 금융·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잇달아 파업을 벌였고, 철도 노동자들은 두 달이 넘도록 파업했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임금 억제(또는 삭감)와 노동강도 강화를 통해 착취율을 끌어올리고, 노동자들을 더 잘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에 열을 올렸다. 저성과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까지 함께 추진해 노동자들의 반감은 더욱 컸다. 공공부문에서 성과주의 강화가 공공서비스 악화를 낳을 것이라는 점도 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발한 중요한 이유였다.

이런 저항 덕분에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이 널리 알려져 반대 여론이 높아졌고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은 다소 차질을 빚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에 일방 도입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시중은행들도 2018년에 시행하겠다고 며 한 달 물려섰다.

그럼에도 올해부터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가 시행됐다. 물론 여러 공공기관 노조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논란이 계속되고 있긴 하다. 특히 금융·공공부문 노조들은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성과연봉제 폐지를 요구해, 문재인한테서 폐기 약속을 받았다.

차일피일

보수 언론들과 사용자 단체들은 새 정부의 등장으로 성과연봉제 개편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노동자들의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점으로 되돌아갈까 봐 우려하고 있다. ‘성과연봉제 폐기 후 전면 재검토’를 약속한 문재인이 당선으로 노동자들 사이에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다.

특히 공공기관 노조들은 상반기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새 정부와 노정교섭을 해 성과연봉제 폐기를 끌어내야 한다고 본다. 이번 경영평가에는 성과연봉제 시행 여부가 평가 요소로 포함돼 있는 데다, 경영평가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성과연봉제를 굳히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한편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노동자들을 고무하는 효과도 내고 있다. 지난해 위원장의 직권조인으로 성

과연봉제가 도입된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성과연봉제 폐기를 내건 집행부가 당선해 번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기대감을 잘 이용해 새 정부에게 성과연봉제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노동자들이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각에서는 성과연봉제 확대가 사실상 중단된 것처럼 낙관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지난해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저항과 퇴진 운동으로 상당한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도 중앙 공공기관뿐 아니라 공무원에 5급 전체로 성과연봉제를 확대했고, 경찰에도 도입돼 내년에는 경찰(과장급)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미 광범하게 시행되고 있는 성과

연봉제를 새 정부가 전면 폐기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새 정부가 성과연봉제 폐기의 구체적 방법과 범위, 시기 등을 둘러싸고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을 끌 수도 있다.

박근혜 식만 안 된다?

무엇보다 문재인이 “박근혜식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데서 보이는 위험성도 경계해야 한다. 최근 문재인은 일반적 추진에는 반대하지만 기존의 연공급 구조도 옳지 않다며 “새로운 직무급제 도입”을 대안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직무급제는 사용자들이 성과급제와 함께 대안으로 요구해 왔던 임금체계다.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견

해가 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직무 체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제가 호봉에 따른 임금 상승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 양보를 요구하고, ‘공정성’을 위해 연공급 구조를 바꾸자는 문재인이 주장한 사용자들의 직무성과급제 도입 촉구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은행연합회장 하영구가 문재인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포인트는 도입 방법에 대한 것”일 뿐이라며 “호봉제 폐지, 임금체계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직무성과급제를 주장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한편, 노동운동 일각에서도 직무급제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안적 임금체계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일부 산별노조들은 직무급제에 대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의 일부는 고임금 노동자들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머지 사람들은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 직무급제를 주장한다. 당연히 후자가 전자보다는 낫다. 그러나 이를 산별교섭(혹은 노정교섭)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을 경시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애초에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착취율을 높이려고 지배자들이 제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공격을 저지하고 상향평준화 식으로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은 사용자와 노동자들의 힘 관계에 달려 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성과연봉제 추진에 약간이라도 차질을 빚게 한 핵심적인 동력은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었다. 새 정부 하에서도 마찬가지다.

전교조·공무원노조 인정하라

정원석 전교조 조합원

새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문제다. ‘노조할 권리 보장’은 노동개악 철회, 최저임금 1만 원 등과 더불어 노동계의 핵심 요구다.

박근혜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빌미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만들고 집요하게 탄압했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수차례 반려했고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교사·공무원의 기본권 제한은 군사독재의 잔재다. 박정희 정권은 교원노조를 강제 해산시켰고, 국가공무원법을 개악하면서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권을 박탈했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저지 투쟁 과정에서 지난해 34명이 해직됐고, 올해도 노조 전임자 16명이 징계 위협을 받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에서 해고된 조합원 중 1백36명

이 아직 해직자로 남아 있다. 해고자 복직 문제도 함께 해결돼야 한다.

두 노조에 대한 탄압은 공무원연금 삭감, 성과주의 임금체계 강화, 교원업적평가 도입 등 박근혜의 ‘공공개혁’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교사·공무원의 조건은 교육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좌우한다. 따라서 교사·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은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조처다.

공무원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며 자기 사용자에게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이롭다. 전교조는 결성 당시부터 존지 거부, 교육민주화 투쟁, 참교육 실천을 주도했다. 공무원노조도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19대 대선에서도 상·하수도 민간위탁 반대, 대학교조조정 중단, 교육재정 확대·무상교육 실시 등 정부의 신

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고 사회공공성과 복지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와 우파가 한사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이유이다.

취임 후 즉시

문재인은 대선에서 “정부가 해직자의 공무원·교직원 노조 가입을 금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라며 공무원노조·전교조의 합법화 의사를 내비쳤다. 대통령 취임 후 즉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노동조합 일반법에 의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해직공무원 전원 복직 등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은 약속대로 당장 법외노조를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 그치지 않고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조처뿐 아니라 국회에서 관련법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

새 정부 탄생으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가 합법화되리라 기대가 높다. 그러나 이것이 자동적인 과정은 아닐 것이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는 사회적 여론과 계급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민감한 쟁점이다. 우파의 대표주자인 홍준표는 대놓고 민주노총과 전교조에 선전포고를 했다.

민주당의 과거 행적을 보더라도 김대중 정부가 교원노조법으로, 노무현 정부가 공무원노조법으로 반쪽짜리 노조를 만들었다. 교육부가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2000년에서 2002년 사이 단 세 차례뿐, 정책과 예산은 교섭대상이 아니라며 줄곧 회피했다.

2004년 공무원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파업했을 때, 노무현 정부는 4백29명을 무더기로 해고했다. 전교조가 2006년 교원평가·성과급 반대 연가투쟁을 벌이자, 정부는

2001년과 2003년 연가투쟁 가담 경력까지 들춰서 4백여 명을 대량 징계했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민주당 정부가 보인 한계를 스스로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후보 시절 법외노조에 대해서는 언급해도 교원노조법이나 공무원노조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교원노조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법률 개정 우선 추진 필요, 단체행동권은 공공사업장에 준하는 형태로 보장하는 방안 검토” 등 모호한 입장만 내놔다. 더구나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가 심화하는 속에서 교육과 행정에 대한 국가 통제를 유지·강화하려는 압력이 계속될 것이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쟁취하는 진정한 힘은 정권교체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노동3권을 쟁취하려면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이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 무엇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전 조사위원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최근 '분노의 촛불 세대를 위한 토론광장'(4월 29~30일)에서 '세월호 참사, 거짓말과 진실'을 주제로 연설한 것을 축약한 것이다. 강연록 전문은 온라인에서 볼 수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년 동안 줄기차게 진실 규명을 외치고, 박근혜까지 구속시켰는데, 아직도 속 시원히 밝혀진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인양을 시작하겠다고 말한 게 2015년 4월 15일이었는데, 인양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그 해] 하반기부터였어요. 계속 지연됐죠. 지난해 11월에 인양업체인 상하이벨비지가 인양 공법을 바꿨습니다. 지금 들어올린 방식으로요. 그 뒤 불과 3개월 만에 들어올렸습니다. 인양 초기에도 그 공법이 논의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배제됐는지 앞으로 밝혀져야 될 대목입니다.

[특조위가 종료돼서] 선체를 조사할 기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선체 조사를 먼저 진행하자'고 해서 선체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3월에 제정했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은 10개월입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활동 기간이 언제 시작됐는지를 두고 계속 싸웠잖아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선체 조사 특별법을 제정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조사 개시를 결정한 날부터 시작한다'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런데 선체조사위원회는 조사 개시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예산이 나오고 나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2기 특조위 법안은 빠르면 올해 12월 즈음에 제정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실효성 있게 조사를 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더 지켜보고 더 압박도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정부가 협조를 잘 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과거 청산 작업이 많이 진행이 됐죠. 그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청와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의문사나 군사 정권 시절에 가해졌던 여러 가지 폭력 사건들에 대한 조사 대상 기관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기관들이잖아요? 국정원, 경찰, 검찰, 군대. 정권이 바뀔다고 이 기관들이 말 잘 듣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면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국정원이나 군 기무사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당시에 쉽지 않았습니

다. 노무현 정부도 사실 제대로 우리의 열망만큼 하지 못했죠. 오히려 거꾸로 갔죠. 그러면서 과거 청산 운동이 힘을 잃어 가면서 더 어려워지게 됐고요.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명박 정부까지 계속됐지만 거의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2기 특조위는 조사 기간을 조사 개시 결정을 한 때로부터 3년으로 잡고



사단법인

있습니 다. 법이 제정되면 직원 채용, 예산 배정 등에 몇 개월이 걸려요. 짧으면 3~4개월, 길면 6개월가량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차기 정부 말까지 가는 거죠. 경찰, 검찰, 국정원, 해군, 청와대 등 다 조사해야 되잖아요. 계속 관심 가지고 압박할 수 있는 자세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참사'인가?

사회의 병폐가 깃들어 있다는 인식이 담겨 있는 단어가 바로 '참사'일 겁니다.

당시 해경 123정장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 법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3정이 방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세월호에 해경이 직접 진입을 해서 승객들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승객들을 퇴선을 시킬 수 있었다. 그렇게 했다면 전원을 구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그러니까 과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실제로 그럴 능력이 있었을까? 해경은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아요. 2011년에 수난구조법이 개정됩니다. 그 내용은 구조 업무의 민영화예요. 당시에 국회의원이 해경 차장 임창수에 게 질문을 했죠. "그렇게 [법 개정]하면 긴급한 해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생명을 구할 수 있겠냐? 국가가 관련 장비나 인력을 보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자 해경 차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해양 사고는 연간 계속 발생하는 게 아니다",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민간과의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 놓으면 예산도 절감된다." 국가는 최소한의 초기 개입 인원만 남겨 놓고 나머지 구조 업무는 전부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정되고 나니까 해경은 선박 사고에 대응해서 승객들을 구조하는 훈련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특조위에 있으면서 해경의 3, 4년치 훈련 기록들을 보니까, 바다에 빠진 사람 건져 올리는 훈련만 해요. 제가



김미리 기자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퇴진 제의 사유였다

123정장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상황에서 판단을 아파 못 했을 거예요.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훈련을 해본 적도 없어서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123정장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구조 업무 시스템이 민영화됨으로써 발생하는 가장 극단적인 경우를 보여 주는 게 바로 세월호 참사라는 걸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안전 점검 업무가 기업의 손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세월호가 출항을 [시작]한 게 2013년 3월이었죠. [참사 전까지] 그동안 과적을 안 한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과적의 위험성에 대해 이미 선원들이 많이 문제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세월호와] 쌍둥이 배로 알려져 있는 오하마나 호의 선장은 완강하게 저항을 많이 했었다고 해요. 실제로 세월호가 떠나기 전에 먼저 떠난 오하마나 호에 과적을 많이 못 했대요. 그래서 이날 유독 [세월호에] 더 많이 과적을 했다고 당시 화물 기사들이 증언했습니다.

어떻게 과적을 일삼을 수 있었을까요?

안전 점검을 한국해운조합의 운항 관리자가 합니다. 운항관리자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출항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조합은 선주 회사들이 돈 내서 만든 이익 단체거든요. [선사가 뱌] 돈으로 운항 관리자 월급을 중단 말이에요. 그러니 선주 말을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과적에 해도 제재 받을 일이 없었던 겁니다. 안전 점검을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신자유주의 민영화 정책으로 추진됐던 내용입니다.

선령 제한을 늘린 것, 선박 안전 점검에 관한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한 것 등이 큰 틀에서 보면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인 배경입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이후에 크고 작은 해양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선령 제한을 30년으로 늘리고

나니까 한국의 연안 여객선 중 노후 선박의 비율이 50퍼센트가 넘습니다.

난항을 겪은 진상 규명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죠. '진상 규명 철저히 하겠다.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언제든지 찾아와라.' 그런데 찾아가려고만 하면 다 막았어요. 계속 거짓말하고요. 그래서 [유가족들이] 대통령한테 직접 얘기하겠다고 했죠.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농성을 했습니다. 그 장소를 경찰 차벽으로 꽂꽂 둘러싸서 외부에서 보이지도 않게 하고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진상 규명을 방해했습니다. 2014년 6월달에 국회에서 국정 조사를 했습니다. 청와대에 1백 85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별 내용 없는 세 건만 제출했습니다. 김기춘 증인 채택은 거부하고, 특별법은 '사법 체계를 교란한다' 등의 이유로 수사권을 줄 수 없다고 완강하게 버텼던 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특별법상으로는 [증인이] 출석을 안 하면 [특조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동행명령장을 몇 건 발부했죠. MBC 사장 등에게요. 그런데 동행명령장은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MBC 사장 같은 사람들이 이게 무서워서 출

석하겠습니까?

자료 제출 요청도 특조위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말 안 줘니다. 재촉을 하면 그제서야 몇 개 주는데 정말 영양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엄청나게 끌어요. 압수수색 권한이 없다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게 실지 조사 권한이었어요. 예를 들면, 해경이 자료를 안 주면 해경에 가서 '실지 조사 하러 왔다'고 하고, 안 보여 주면 그 안에서 농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지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압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권한을 좀 활용하지 않았어요. 아쉬운 부분입니다.

2015년 11월 20일에 해수부 문건이 폭로됐습니다. '청와대에 대한 조사 안건을 의결하게 되면 여당 추천 위원들은 전원 사퇴해라', '위원회의 구성이나 의사 결정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라' 등등. 행동 지침을 여당 측 위원들에게 하달한 거죠. 실제로 똑같이 했어요.

무엇을 밝혀야 하나?

침몰 원인을 아직 잘 모릅니다. 선체 조사위원회가 있지만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수사는 이렇게 돼 있죠. '세월호가 무리하게 증톤을 했고, 과적으로 복원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운항을 하다가 조타 미숙으로 대각



김미리 기자



김영조 기자

운동은 정권 교체에서 멈추지 말고 문재인 정부가 참사 해결에 나서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인양된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

도의 변침을 했고, 화물 고박이 부실한 상태에서 화물이 쏠리면서 복원력을 상실하게 됐다.’

그런데 정작 재판에서는 조타 실수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조타 실수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배가 침몰했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판결문에서도 남겨 놔줍니다.

항적 기록은 위성을 통해서 위치 정보를 수신을 해서 국가 전산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데, 우리 나라 시스템이 그다지 좋지 않은가 봐요. 신호가 자주 끊긴대요. 세월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30초씩 비는 구간은 없어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쯤 지나서 세종시에 있는 국가 전산 서버에 대한 대대적인 수리 작업이 시작됩니다. 정상적인 점검과 수리였다고 정부는 얘기했지만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정확한 화물 적재량도 우리가 모르는 거죠. 인양된 선체를 조사하다 보면 남아 있는 화물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테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평형수를 감축하고 운항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화물을 많이 실으려다 보니까 평형수를 줄이는 방법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 배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평형수 탱크에 구멍을 뚫어서 뭐가 얼마나 남아 있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선장과 선원들을 먼저 구조했는지 여전히 의혹이 있는 대목입니다. 해경이 선장을 자기 아파트로 데려간 것도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해군이 통영함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해경은 저지했고 미군의 지원도 저지했어요. 과연 해경이 ‘안 보내도 돼요’ 그러면 해군이 ‘알았어요’ 할 수 있는 관계인가? 이는 조율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제 <미디어오늘>이 국정원 개입 의혹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청해진해

운이 참사 직후에 국정원 직원과 통화를 했는데 해경 수사 보고서에는 이 통화 내역을 다른 사람과 통화한 것처럼 작성이 돼 있었던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정원이 세월호에 개입했다는 흔적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자판기 위치나 휴가 일정 등을 다 국정원에 보고하라고 돼 있었거든요. 또, 사고가 발생하면 국정원에 직접 보고하도록 ‘보고 계통도’에 적혀 있었는데, 이것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국정원에 보고하기로 돼 있는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국정원은 9시 45분쯤에 뉴스를 보고 [사고 소식을] 알았다고 했죠? 그런데 이미 9시 30분경부터 청해진해운 직원이 국정원 직원과 몇 차례에 걸쳐서 통화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청해진해운의 내부 자료에 국정원 직원이 왔다 갔다거나 회식을 했거나 하는 기록들이 다 나와요. 세월호를 도입할 때부터 이미 국정원이 관여했다는 [직원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시 30분에 해경 청장에게 전화를 했다는데 같은 시각에 청와대 대변인 민경우가 기자 브리핑을 하면서 ‘대통령이 해경청장과 통화를 했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말이죠. 특검은 이 부분 수사를 못하고 검찰로 넘겼는데, 검찰은 수사를 안 하고 끝내 버렸죠.

세월호 참사의 교훈

저는 세월호 참사와 국정원 관련 의혹,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등을 당연히 밝혀야 되지만, 어찌 보면 그것들은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질적 내용은 자본의 탐욕을 보장해 주기 위한 시스템이 끊임없이 안전에 관한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고 규제를 완화해 줬다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적 시스템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

할 수밖에 없었던 사고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고를 방지하려면, 안전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업 이익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희생돼야 될 문제는 더더욱 아니며, 결국은 민주주의로 풀어야 될 문제가 돼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문제여야 합니다.

우리는 전문가주의에 빠져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전이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정말 어떤 것이 위험하고 어떤 경우에 위험성이 커지는 것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현재 우리 나라의 원전이 안전한 상태인지 시민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가슴기 참사도 마찬가지죠. 선행 제한이 20년이 맞는지 30년이 맞는지도 당연히 모르죠. 우리는 그걸 전문가들한테 너무 맡겨 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문가들은 결국 기업과 정부에 붙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문가라고 행세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기업의 이윤 보장을 위해서 국가에 안전 기준들을 끊임 없이 하향 조정하려고 하고 국가가 이를 보증해 주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이 카르텔 속에서 안전의 문제가 기업의 이윤 논리 속에 종속돼 버리는 상황이 돼 버린 것입니다.

이걸 깨려면 안전의 문제를 시민 사회의 민주주의 의제로 복원시켜야 합니다. 우리 동네 공장에 어떤 유해 물질이 있는지 알 권리를 주장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들을 기업과 지자체가 마련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원전의 필요성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요구들을 시민들이 할 수 있고 관철될 수 있을 때, 안전이 담보될 수 있을 겁니다.

세월호 참사는, 안전이 민주주의 문제여야 한다는 걸 시민들한테 가르쳐 준 사건이었고 바로 그런 방향에서 시민들이 행동할 때에만 이 교훈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 해결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부채

김문성

연인원 1천7백만 명이 참가한 박근혜 퇴진 운동이 내세운 제1의 퇴진 사유는 세월호였다. 그러므로 압도적 정권교체 열원 속에서 당당한 문재인은 세월호 운동에도 큰 빛을 쬔다고 할 수 있다.

대선 막판에 문재인은 자기에게 투표하는 것이 세월호 진상 규명에 투표하는 것이라고 홍보했다. 개혁 기대 지지층의 표심이 정의당 심상정에게 쏠리는 것에 대한 대응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세월호 참사 문제 해결은 문재인 정부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세월호 참사 해결은 남은 진상을 밝혀내는 것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와 사회의 이윤 우선 논리에 메스를 대는 것이다.

세월호 선체 조사는 물론이고, 해양수산부 관료들의 선체 인양 태업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 박근혜·이명박의 친기업 규제 완화 조치들과 그 배경이 됐을 (재판 중이기도 한) 기업주들의 로비도 더 파헤쳐야 한다. 세월호 경영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국가정보원도 수사해야 한다. 당연히 전 정권의 수사 방해와 유가족 비난 관제 동원 의혹도 파헤쳐야 한다.

그러나 그 계급 기반상, 아래로부터의 압력 없이는 문재인 정부

가 행정부 관료 조직과 이윤 우선 시스템에 메스를 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자본가 기반 정당임으로 —비록 자본가들의 제2선호 정당이지만— 야당 시절에도 이런 쟁점에서 불철저하게 대응해 왔다. 집권하면 더더욱 몸을 사릴 것이다. 그러므로 운동은 기다리지 말고 독자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행동해야 한다.

운동은 국회에 계류된 세월호 2기 특조위 특별법의 국회 처리만 기다리지 말고, 정부가 검찰을 지휘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새 정권이 여소야대 국회를 핑계 대며 시급한 과제들을 미루도록 봐 주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검찰을 믿어서가 아니라, 국정원 수사를 시도라도 할 수 있는 기관은 검찰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이 자신의 국가를 (아래로부터) 창출하기 전까지는 기존 국가에 대한 압박이 필요할 때가 있다.

국가와 기업주들에 대한 압력을 극대화하려면 당연히 조직 노동계급의 기여가 필요할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행동과 독립적 계급 정치가 중요한 것이다.

퇴진 운동이 크고 거센 압박을 가한 결과, 특검이 이재용을 구속하고 검찰이 박근혜와 이재용을 뇌물죄로 기소한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커다란 모순에 부닥치게 될 문재인 정부의 여성 정책

이현주

선거 운동 기간에 문재인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페미니즘의 부흥 분위기 속에서,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평범한 여성들의 열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많은 여성들은 노동자로 착취당하면서도 가족과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 이 이중의 굴레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더 악화됐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무상보육’ 공약의 파산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44퍼센트가 여성일 정도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는 늘어났다. 하지만 여성 노동자의 55퍼센트가 비정규직으로 일한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일자리인 시간제 일자리가 대폭 늘어났다. 그리고 시간제 노동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다. 여성 노동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며 일한다. 100대 64의 남녀 임금격차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일하면서 자녀도 돌보며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출산하기로 마음먹은 여성 노동자들은 일이나 출산·육아나 양자택일의 기로에 선다. 질 좋고 저렴한 국공립 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시설수 기준 6퍼센트 대). 저임금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 육아휴직제도는 그림의 떡이다. 그래서 기혼 여성 중 절반가량이 경력 단절을 겪는다. 경력 단절 후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대체로 저임금·비정규직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여성을 옹가 때는 이중의 굴레를 해결하기를 요구 받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런 요구들이 제기될 것이다. 안정적인고 고임금의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



문재인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최저임금 즉각 1만 원으로 인상, 국공립 보육시설과 직장 내 보육시설 대폭 확충 등이 시행돼야 한다. 남녀 노동자 모두를 위해 살인적 노동시간이 대폭 줄어야 한다. 이때 임금과 노동조건이 후퇴해선 안 된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나쁜 일자리 정책인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폐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여성들의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킬 노동개악 지침들도 즉각 폐기해야 한다 등등.

문재인은 이런 약속을 했다. 남녀 동수 내각,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남녀 임금 격차 해소, 육아휴직 급여 인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용 아동수 기준 40퍼센트까지), 비정규직 감축,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등을 통해 “성평등 사회”를 만들겠다.

특히 남녀 동수 내각을 강조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내각보다 여성 비율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성주류화’를 전략으로 삼아 온 페미

니스트들은 여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듯하다. 다른 보수주의자들보다 여성 운동가들이 국가기구에 참여해 차별적 법제도를 개선하고 성평등 정책을 편다면 좋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여성 지도자·관료 배출과 법·제도 개선이 자동으로 여성 대중의 삶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경험에서 보듯, 입각한 여성운동가들이 국가기구에 포섭돼 여성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 소극적이거나 최악의 경우 배신적인 태도를 취할 위험도 있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여성 정책은 온건하고 그조차 과연 실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가령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에서 실제로 순수하게 느는 일자리는 17만 개 수준이다. 비정규직 감축을 위해 상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언제, 얼마

나 할지 전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2020년까지라고 명시해, 노동운동의 요구보다 2년가량 늦다. 주 52시간제라는 노동시간 단축 공약도 궤차적이다.(민주노총은 주 35시간으로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 왔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이나 노동조건 후퇴 금지도 말하지 않는다.

문재인이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임금공시제’와 ‘블라인드 채용 강화’다. 있어도 나쁜 건 없지만 임금 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매우 의문이다. 지금도 임금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기업주들은 이조차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동일임금 동일노동 조항을 회피하려고 온갖 방식으로 꼼수를 쓰는 기업주들을 문재인은 강력 처벌할 방안도 제시하지 않아 무기력하다.

무엇보다 문재인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유연근무(기업주 마음대로 유연한 일자리)를 뜻하는 코드명) 확대라는 이전 정부들의 정책을 계승하려 한다. 비정규직을 대폭 늘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원죄’에 대해서도 반성한 적이 없다.

이용아동수 기준 40퍼센트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겠다는 공약도 그동안 운동이 요구해 온 것(시설수 50퍼센트)에 못 미친다.

또, 문재인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추진한 서울형 어린이집을 모델로 삼고 있는데, 이 모델은 위탁 계약 방식이다. 그래서 보육의 질과 보육노동자의 처우가 직영 국공립 어린이집에 못 미친다. 재원은 늘릴 생각 없이,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 소유주들의 이익을 거스르지 않는 수준에서 추진하려 하니 생기는 근본적 한계다.

문재인이 이토록 온건한 개혁만을 약속한 것은 기업주들에게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공약 실현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재원 마련 방안은 비어 있다. 문재인은 법인세 인상은 한사코 피하려 한다.

이미 선거운동 기간에 문재인은 보수주의자들과 협조할 태세가 돼 있음을 보여 줬다.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는가 하면, 최근 차별반대운동이 강조해 온 차별금지법 제정과 낙태죄 폐지도 찬성하지 않았다.

경제적·지정학적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문재인은 자신이 약속한 알량한 수준의 개혁조차 배신하고 여성과 남성 노동자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럴 때, 그 정부에 입각한(그리고 이를 전략으로 삼은) 페미니스트들은 큰 모순에 부딪힐 수 있다.

여성들의 실질적 삶 개선을 위해 문재인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여성·남성 노동자들의 계급투쟁이 필요한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역사 국정교과서 즉각 폐지하라

4월 28일 역사학계·역사교육계가 민주당·정의당과 ‘국정 역사교과서 완전 폐기와 역사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초등 교과서를 포함하여 국정 역사교과서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며, “역사교과서 국정제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입법조치를 서두른다”는 것이다.

이 협약 내용처럼 문재인은 당선하자마자 국정 역사교과서부터 당장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을 수 있다. 2015년 11월 3일 박근혜가 국정교과서를 확정 고시하자, 문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정교과서를 막기 위한 모든 법적, 제도적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 어

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적어도 역사교육에서는 아이들에게 획일적인 교육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역사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그러나 2016년 총선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됐지만 ‘역사 교과과정 도서 다양성 보장 특별법(이하 국정교과서금지법)’은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등 우파들의 반발을 핑계 대며 허송세월했다. 그래서 국정 역사교과서는 박근혜가 파면·구속된 상황에서도 완전히 폐기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는 박근혜를 옹호하는 자답게 “초·중·고교에서는 국정교과서로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자들과 “협치”를 중시하는 방향을 추구하다가 국정교과서 폐기와 같은

매우 광범한 지지를 받는 개혁조차 못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대중적 저항에 밀려 2017년부터 강행하려던 국정 역사교과서를 밀어붙이지 못했다. 현장 적용을 2018년도로 미루고 국·검정 혼용을 하겠다고 후퇴해야 했다.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를 이끈 황교안이 연구학교 시범운영을 시도했지만, 다행히 문명고 학생·교사·학부모들의 투쟁으로 ‘연구학교 지정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이 인용돼 그마저도 중단돼야 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보조교재나 위기자료로 국정 역사교과서 보급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완전히 폐기되지 않은 것이다. 국·검정 혼용을 위해 1년 만에 검정교

과서를 개발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12대 약속 중 적폐청산의 요구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가 포함돼 있다. 국정교과서 폐지는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 가능하다. 즉 문재인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바로 폐지할 수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조차 1992년에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가,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가 헌법의 이념을 고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유엔 역시 2013년에 “국가가 역사교과서를 하나로 줄이는 것은 퇴보적 조치이며 국가가 후원하는 교과서는 정치화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2015년 베트남도 유엔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국정에서 검인정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 남한도

역사의 퇴행인 국정교과서를 폐지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발행제로 나가야 한다.

노무현이 공약한 국가보안법 개정, 과거청산, 사립학교법 개정, 언론개혁 등 ‘4대 개혁’은 여대야소 국회였음에도 여야합의로 누더기가 된 바 있다. 그래서 당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개혁입법안은 사실상 개혁 포기이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보자면,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비롯한 민주적 개혁입법은 정부나 국회에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다. 박근혜를 파면·구속시킨 힘, 즉 대중 행동에 달려 있다.

촛불운동의 수혜를 입은 문재인은 역사 국정교과서부터 당장 폐지하라.

김현옥 고교 역사교사

차별·억압을 유지하겠다는 문재인의 이주민 정책

임준형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해 새 정부가 출범한다. 문재인은 이주민 관련 공약에서 일부 부분적 개선을 약속했지만 정작 핵심적인 사항들은 모두 비켜갔다.

이제까지 정부들은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우려와 자본가들의 요구에 따라 이주노동자 유입을 점차 늘려왔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2백만 명을 넘어선 국내 거주 이주민 중 이주노동자는 약 1백만 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이주노동자가 필요해 데려오면서도 정부는 통제를 강화해 이주노동자를 저임금의 유연한 노동력으로 활용하려고 해 왔다. 체류 기간을 제한해 영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사업장 이동조차 금지한 고용허가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이런 자의적인 출입국 규제로 발생하는 미등록 이주민을 상대로 야만적인 단속추방을 벌여 이주민들이 제도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효과를 내왔다. 이 때문에 단속 과정에서 한 해 평균 두 명이 넘는 이주민이 사망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은 고용허가제 폐지, 단속추방 중단과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에 모두 찬성하지 않았다. “인권과 불법체류로 인한 국내 노동시장의 영향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다만 농축산업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63조를 “최대한 적용제외업종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단속 과정에 영장주의를 도입하겠다는 등 부분적인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런 개선책들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이주노동자의 조건을 일부 개선하고 단속 과정의 폭력을 다소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폭넓게 존재한다. 그러나 사업장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고용허가제의 핵심 문제점을 그대로 둔다면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고용주에 종속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법무부는 지금도 스스로 만든 단속지침을 어기며 마구잡이식 단속을 벌인다. 게다가 단속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자체가 이주민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영장주의 도입으로 단속의 폐해를 막기는 힘들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전력에 비춰 보면 문재인이 스스로 공약한 개선안조차 얼마나 진지하게 추진할지 의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5대 차별철폐’ 사항의 하나로 ‘외국인근로자 차별철폐’를 공약했다(여기에 비정규직도 있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를 만들고 이를 정착시키려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노무현 정부는 역대 정부들 중 이주노동자를 가장 많이 추방했다. 억울하게 구금된 미등록 이주노동자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도 노무현 정부 하에서 일어났다.

미국의 중동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면서 무슬림과 이주민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도 했다.

문재인은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도 공약했다. 그 방안은 결혼이민자 정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확립,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별학급과 대안학교 지원,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과 개발 및 교사연수 실시, 국민 대상 다문화수용성 교육 내실화 및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의 보호소 구금 금지도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결혼 이주민(여성)들의



문재인은 외면한 고용허가제 폐지 요구 새 정부 하에서도 이주민 권리를 위해 싸우자

안정적인 체류 문제는 외면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은 배우자(남편)의 신원 보증이 있어야만 체류 자격을 갱신할 수 있다. 그래서 가정 폭력을 당해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고통받고 있다. 2012년 대선 공약에 있던 “결혼 이주여성의 인권과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겠다는 표현조차 이번에는 사라졌다.

노무현 정부는 결혼이민자 지원보다는 ‘저출산·고령화와 사회불안 방지’ 대책으로서 가족 지원·통합·유지에 초점을 뒀다. 이에 따라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여성 결혼이주민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우선적으로 영주 자격을 부여하기도 했다. 문재인이 결혼 이주민의 안정적인 체류보다 다

문화가족’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은 이런 시각의 연장선인 듯하다.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제국주의간 경쟁이 나날이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이주민을 속죄양 삼는 공격은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이간질이 노동자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고 서로 분열한다면 지배계급에 맞서 싸울 노동계급의 힘이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노동운동과 진보·좌파가 이런 이간질에 맞서 이주민의 권리를 위해 대담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허가제 폐지와 단속추방 중단,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이주여성 체류권 보장, 취업이주여성의 노동인권 보장과 미등록 이주노동·무국적자 아동의 교육권·사회권 보장, 이주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 취급하는 테러방지법 폐지 등이 쟁점이 될 것이다.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마포구청 시간선택 공무원제 조직화로 성과를 내다
- ★ 노인 문제 장수를 재앙으로 만든 사회
- ★ 한전KDN 동료 간 인사평가 제도 반대한다
- ★ 서평 《새로 쓰는 고조선 역사》 민족주의에 집착해 공상으로 고대사를 지어내다

17년 전통의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맑시즘 2017

7월 20일(목) ~ 23일(일) 장소: 서울 / 주최: 노동자연대

참가신청 · 문의

marxism.or.kr

02-2271-2395, 010-4909-2026(문자 가능), marxism@marxism.or.kr

연사들



해외 연사 실라 맥그리거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당원이고 여성 차별 문제에 관해 여러 글을 썼다. 국제사회주의자들(IS)이 발행한 <위민스 보이스> (Women's Voice)의 편집자였다.

맑시즘2017에서 연설할 주제 :

- ★ 마르크스주의와 오늘날의 여성 차별
- ★ 섹슈얼리티와 자본주의
- ★ 여성과 《자본론》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
민행동(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조직노동자운동 팀장



유경근
예은 아빠,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오준호
《세월호를 기록하다》
(마지북스) 저자, 416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
위원회 작가기록단



한선희
《다윈과 함께》(사이언스북스)
공저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
의학 교실 박사 과정 수료



최일봉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최인기
빈민해방실천연대
수석부위원장



박흥수
철도 기관사,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 객원연구위원

...

※ 이 외에도 국내 노동운동·
사회운동 활동가, 진보·좌파
저술가들 수십 명이 맑시즘
2017에 옵니다.

옛 소련은 러시아 혁명으로부터 용어만 이어받은 체제다

최일봉

요즘, 자본주의가 아닌 대안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졌다. 세계경제 침체가 10년째 지속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인 듯하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고민되는 점이 있는데, 바로 ‘사회주의’ 하면 북한이 연상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핵무기로 남한을 위협하는 북한 말이다.

그런데 북한은 옛 소련의 시스템이 이식된 사회다. 그러니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소련과 북한의 악랄한 독재 체제와 연관시키게 된다. 이 시스템은 1920년대 말부터 1991년 소련 몰락 때까지 존속했는데, 국제적 라벨로 부르려면 스탈린주의라고 한다.

사회주의에 대한 토론은 우리 나라에서는 여전히 북한 문제, 즉 스탈린주의 문제를 놓고 벌어지고 있다. 소련과 북한이 사회주의 사회를 자처해 왔기 때문이다. 심지어 소련은 마르크스와 레닌의 사상을 구현한 사회를 자처했다.

하지만 말과 행동을 구분해야 한다. 소련의 공식 이데올로기가 뭐라고 말했든 소련은 사회주의와 아무 관계 없는 시스템이었다. 진보·좌파의 아무도 박정희-전두환 정권을 민주주의로 보지 않는다. 박정희-전두환이 자기네 정권을 민주주의라고 수없이 떠들어 댔어도 말이다. 연사가 아니라 실제 현실로 판단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스탈린주의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생각한 사회주의와 아무 관계도 없다. 스탈린은 노동자 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잔인한 관료 국가 체제로 변모시켰다. 그 국가는 인민을 체계적이면서도 혹독하게 착취하고 억압하는 국가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운영됐다.

국가의 성격이 일반화하면서 사회의 성격도 곧 완전히 달라졌다. 일종의 위로부터의 부르주아 혁명이었다.

고립

그러나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은 전 세계의 노동자들과 빈곤층들, 그리고 천대받는 민족들을 고무했다. 러시아 혁명은 마르크스·엥겔스의 사상에 고취돼 일어난 최초의 혁명으로, 낡은 절대주의 국가가 혁명으로 폐지됐고, 옛 지배계급은 (혁명 직후의) 내전에서 패배했다. 옛 지배계급은 대토지를 소유한 귀족으로, 군장성이자 경찰 간부들이었다. 새 지배계급으로 발돋움하길 원했던 민간 자본가 계급도 패배했다.

옛 전제정 대신에 노동자 국가가 그 자리에 들어섰다. 노동자 국가는 노동자 평의회(소비에트)로 조직됐고, 진정으로 민주적이었다. 공무원들이 노동자 평균임금만을 받았고, 잘못했을 경우 즉시 소환됐던 것이다. 노동자들은 노동자 평의회를 통해 노동자 계급에 이익이 되도록 사회를 운영했다. 그래서 이윤이 아니라 필요에 근거해 생



1956년 헝가리 노동자 혁명 스탈린 동상을 박살내고 있다

산을 조직하려 애썼다.

일터에서의 업무는 3자 위원회라는 기구에 의해 조정됐는데, 3자 위원회는 그 직장의 노동자 위원회, 노동자들의 감독을 받는 기술관리자, 현지 공산당 조직으로 이뤄져 있었다.

러시아 혁명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평화 운동이었다. 동부 전선에서 제1차세계대전을 끝냈던 것이다.(서부전선에서의 전쟁은 1년 뒤 독일 혁명이 끝났다.) 러시아 혁명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야만성을 끝장내는 대안이 있다는 희망을 보여 줬다.

그러나 서방 제국주의 열강들과 러시아 국내의 우익 집단들이 혁명 정부에 대적해 협공을 퍼, 처참한 내전이 일어났다. 노동자 정부는 내전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노동자 계급의 절반 이상이 사망했고, 나머지는 식량을 구하러 귀농하거나, 아니면 국가 관료가 됐다.

노동자 없는 노동자 권력은 껌데기에 불과했고, 급속히 관료화했다.

설상가상으로 1923년 10월 독일 혁명 패배, 1926년 영국 총파업 패배, 1927년 중국 혁명 패배라는 불행한 상

황이 전개됐다. 국제 혁명들이 잇달아 패배하면서 소련은 정치적·경제적으로 고립됐다.

그러자 스탈린은 관료를 대표해 국제 혁명이라는 꿈을 버리자고 주장했다. 소련 한 나라에서도 계급 없는 사회, 사회주의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사상을 그는 ‘일국사회주의’라고 했다. 신흥 관료층은 스탈린의 이런 민족주의와 실용주의에 찬동하며 그 주위에 결집했다.

‘일국사회주의’는 국제주의의 완전한 포기였다. 그래서 다른 나라 혁명 운동은 소련의 국익을 위해 노동자 혁명을 포기하고 자국 지배계급 일부나 중간계급과 동맹해야 했다.

‘일국사회주의’ 노선에 따라 러시아 농민은 강제로 토지를 빼앗기고 집단 농장에 들어가야 했다. 저항하면 고문을 당하고 피살됐다.

도시의 노동자는 공장에 대한 노동자 관리권을 몽땅 빼앗겼다. 뿐만 아니라 노조 결성권, 단체교섭권, 쟁의권 등 노동기본권도 모두 빼앗겼다. 일인 경영자가 모든 결정권을 독점했다. 임

금 억제와 노동 통제를 위해서였다.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지닌 단체는 국가에 완전 예측된 채 생산 할당량 채우는 데 동원되는 기구 구실을 했다.

이 모든 일들은 혁명을 뒤집어 버리는 일, 즉 반혁명이었다. 반혁명은 국가 관료가 지도했고, 국가 관료는 신흥 자본가 계급 구실을 했다.

이런 일들이 ‘사회주의’를 자처하는 국가에 의해 자행됐다. 이런 모델은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동유럽 및 북한과,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중국 등 제3세계 나라들에서 복제됐다. 이를 두고 **국가자본주의**라고 한다. 국가자본주의에서는 민간 자본가들이 아니라 국가가 자본을 축적하고 세계 시장에서 다른 경제단위들과 경쟁한다.

스탈린 체제는 러시아 혁명이 이룩한 성취를 모조리 파괴했다. 심지어 러시아 혁명을 이끈 인물들도 파괴했다. 스탈린은 동료 볼셰비키 간부들을 모조리 죽이거나 강제노동수용소로 보내 버렸던 것이다.

러시아 혁명은 패배했다. 분쇄됐다. 전 세계 수억 노동자들이 품고 있던 희망은 절망으로, 혼동으로 바뀌었다.

각국의 공산당들은 가장 헌신적인 투사들을 끌어들이었는데, 이제 이 투사들은 소련의 민간 외교관 구실을 해야 했다. 이를 거부하면 당에서 축출당해야 했다.

1930년대부터 세계 곳곳의 공산당들은 노동자 혁명이라는 전망을 배신하기에 급급하며 노동자 계급의 염원을 배신했다. 독일에서 나치가 등장했을 때, 그리고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좌파 정부가 등장한 것에 고무돼 노동자들이 혁명적 또는 혁명에 조금 못 미치는 행동을 했을 때 등등의 경우에 그랬다.

중국 공산당은 아예 활동 근거지를

농촌으로 옮겼다.

스탈린 체제는 1991년 소련 몰락 때까지 60년 남짓 존속됐다. 스탈린 자신은 1953년에 죽었지만 말이다. 그 뒤로도 자본주의는 형태를 바꿔, 그러니까 민간 자본주의로 변신해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다.

이는 옛 소련의 지배계급인 국가 관료가 소련 몰락 이후에는 ‘올리가르히’라고 불리는 일종의 러시아판 재벌로 변신해 새 체제 하의 지배계급으로 군림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물론 지배계급은 더는 자기 체제를 마르크스주의 운운하는 용어로 치장하지 않는다.

소련의 국가자본주의는 미국과 서유럽의 자본주의와 형태가 달랐다. 소위 ‘5개년 경제 계획’이라는 게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이른바 ‘계획’은 서방, 특히 미국과의 군비 경쟁에 따라 거둬 재조정됐다.(박정희 정권도 5개년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세계 시장의 조건에 반응해 거둬 생산 목표가 조정됐다.)

소련의 계획에서는 군비 증강이 가장 중요했다. 영국·독일·미국 등 서구 강대국들로부터 잇달아 군사적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신행 무기를 만들면 소련도 그에 준하는 수준의 무기를 만들어야 했다. M16 대(對) AK소총, 퍼싱 II 미사일 대(對) SS-20 미사일 식이었다.

군비 경쟁을 위해서는 중공업이 중요했고, 중공업 생산 증대를 위해서는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착취해야 했다. 서방과 마찬가지로 생산성과 능률이 지고의 가치였다. 마르크스는 이를 착취율 또는 잉여가치율이라고 불렀다.

소련은 소유가 거의 다 국유였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민간 자본가 계급, 즉 부르주아지는 없었다. 그럼에도 자본주의였다.

국가자본주의

러시아 혁명과 옛 소련 블록 사회에 대해 명료해야 한다. 그 흥망성쇠에 대해 명료하지 않으면 사회주의자의 사상과 활동은 엉망진창으로 혼란스러워진다. 특히, 노동자 계급의 자체 행동 없이도 소련군 탱크가 사회주의를 갖다 줄 수 있다는(북한) 생각, 또는 지식인 출신 농민 게릴라가 노동자 계급에 해방을 안겨 줄 수 있다는(중국) 생각 따위는 사회주의라는 원칙 자체를 전복시키는 것이다.

오늘날 스탈린주의는 그 체제나 사상이나 예전만 하지 못하다. 그러나 그 유산 또는 잔재는 여전히 영향을 크게 미친다. 특히, 한국에선 그렇다. 북한이 존재하고 있고, 중국이 미국과 각축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제 좌파 측에서 러시아 혁명 흥성기에 고취된 것과 같은 인간 해방의 이상은 찾아보기 힘들다. 사회주의에 관한 토론은 기껏해야 지정학적 경쟁 속에서 미국을 견제할 능력 따위 문제에 대한 토론으로 전락했다.

아니면, 쿠바나 베네수엘라의 사례



스타하노프 운동 착취율 증대 캠페인



서평 | 《붉게 타오른 1917: 만화로 보는 러시아 혁명》

쉽고 재미있는 러시아 혁명 입문서

최재필

올해는 1917년 러시아 혁명 1백 주년이 되는 해다. 이를 기념해 출간된 《붉게 타오른 1917: 만화로 보는 러시아 혁명》은 평범한 여성 노동자 나탈리아와 병사 표트르라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 1917년 러시아에서 벌어진 일을 묘사한다.

이 책은 한마디로 러시아 혁명에 관한 탁월한 입문서다. 평범하던 삶들이 뒤튼들리고 바뀌는 얘기가 러시아 혁명을 쉽고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전달한다. 번역도 평범한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감칠맛 나게 옮겨서 재미나게 읽을 수 있다.

이 책에는 익히 알려진 러시아 혁명가들도 등장한다. 트로츠키가 때 이른 봉기에 반대하며 노동자와 병사를 설득하거나, 레닌이 혁명 와중에 《국가와 혁명》을 저술하는 장면 등이 나온다(레닌은 10월 혁명 직전에 체포를 피하려고 가발을 쓰고 위장하려다 실패하는 익살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책을 읽다 보면 볼셰비키로 결집한 혁명가들이 혁명의 승리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의 진정한 주인공은 평범한 노동자와 병사다. 노동계급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통제하게 됐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10월 혁명으로 나아가게 됐는지를 평범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매우 생생하게 보여 준다. 이 점에서 이 책은 러시아 혁명을 다루는 어느 책보다도 혁명의 진실을 잘 담아낸다.

이 책은 1917년 2월 세계 여성의 날, 러시아 수도 페트로그라드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제1차세계대전에 반대하는 파업을 호소하고 다른 노동자들도



붉게 타오른 1917: 만화로 보는 러시아 혁명
존 뉴싱어(글), 팀 샌더스(그림) | 김원일 옮김
책갈피 | 96쪽 | 10,000원

이에 동참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다음 날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군대가 동원되는데, 병사들은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오히려 시위대 편으로 넘어간다. 러시아 황제 차르를 몰라나게 만든 2월 혁명이 온전히 노동자와 병사의 행동이었음을 잘 보여 준다.

2월 혁명이 성공한 이후 노동자들은 더욱 급진화한다. 공장 경영진이 투쟁에 나서는 노동자들을 해고하려 하자, 오히려 노동자들이 경영진을 내쫓고 공장을 접수해 직접 운영하는 장면이 생생히 묘사된다.

또 이 책은 러시아 혁명을 국제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당시 전쟁을 벌이던 러시아와 독일의 지배자들은 이윤과 영토 확장을 위해 노동계급에게 끔찍한 희생을 강요했다.



이 책에는 소위 '적국'의 병사들이 마침내 진정한 적은 자신들을 사지로 내몬 악랄한 자본가임을 깨닫고 연대하는 감동적인 모습이 나온다. 당시 유럽의 지배자들이 혁명이 자국으로 번질까 봐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도 잘 보여 준다.

10월, 드디어 노동자들이 임시정부

를 끝장내고 권력을 잡는다. 러시아 혁명은 수많은 사람을 죽음과 고통으로 몰아간 제1차세계대전을 마침내 끝냈다. 온갖 차별적 조치를 폐기했고, 평범한 사람들은 평등과 자유를 누렸다.

노동계급은 독자적 대의기관인 소비에트를 만들어 사회 전반을 운영하려 했다. 노동계급이 직접 운영하는 러

시아는 놀라울 만큼 많은 것을 개선한다.

인상적인 장면 하나는 한 여성이 공장에서 혁명과 사회주의가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는 모습이다. 이혼의 자유, 피임과 낙태의 합법화, 공동 탁아소 운영 등을 성취할 것이라고 발표하는데, 실제 10월 혁명 이후에 이런 조치가 성취됐을 뿐 아니라 남성고 동등한 투표권, 고용 평등과 동일 임금의 법으로 보장됐다.

혁명 이후 러시아 여성의 권리는 당시 서방 자본주의 나라보다 더 신장됐다. 낙태 합법화는 세계 최초였다. 공공식당, 공공세탁소 등 덕분에 여성은 가사와 육아에서 해방됐다. 혁명 이후 곧바로 동성애를 비범죄화하고 동성결혼을 인정했다. 지금 기준으로 봐도 매우 급진적 조치다.

러시아 혁명의 성공은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은 자신감을 얻었고 스스로 투쟁에 나섰다. 이 책은 전 세계 곳곳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러시아 혁명을 보며 더 나은 사회를 꿈꾸는 장면으로 마무리된다.

이 얇은 책으로 러시아 혁명을 완전하고 상세하게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책은 주류 역사계가 외면하거나 왜곡해 온 러시아 혁명의 진실을 훌륭히 묘사하고 핵심을 담았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주인공은 평범한 노동자였다. 러시아 혁명은 노동자가 세상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줬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이다. 이 책 머리말에서 강조하듯이 “노동계급은 자력으로 해방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가 21세기 사회주의의 모델로 거론돼 왔다. 베네수엘라는 지속되는 위기 속에서 최근 총선에서 패배했으나, 이제 쿠바를 살사 댄스나 클래식 카와 연관시키며 사회주의를 낭만적으로 묘사하는 수준이 됐다.

물론 쿠바나 베네수엘라는 대담하게 미국 제국주의와 맞서 왔다. 두 국가가 세계의 반제국주의 운동에 제공한 영감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두 국가를 사회주의, 즉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권력으로까지 채색하는 건 사회주의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일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 레닌에게 사회주의는 노동자 계급의 자력 해방이었고, 두 국가는 노동자 계급 정치권력이 아니다. 또한 전 세계의 수십억 노동자들은 여전히 착취당하고 있고, 카스트로와 차베스는 이들에게 노동자 혁명을 촉구한 적이 없다.

더구나 제국주의의 위협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 제국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한은 쿠바와 베네수엘라 민중의 고통은 지속될 것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 레닌이 생각한

사회주의는 미국 등 서구의 노동자 계급이 쿠바와 베네수엘라 등 제3세계 민중과 연대해 제국주의적 지배계급들을 타도하고 세계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구축하는 것이다.

부의 재분배는 좋은 일이지만 사회주의는 그 이상의 것이다. 사회주의는 착취 자체를 없애고, 인간에 의한 인간 차별과 천대를 없애는 것이다. 특히 사회 생활의 모든 측면에 대해 노동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러시아 혁명과 혁명기 볼셰비즘의 이상이었다. 서구 혁명 패배로 러시아가 고립되고 고립 탈피의 그릇된 대안으로 스탈린 체제가 지배하게 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스탈린주의는 국제적 사회주의 운동으로부터 이런 원대한 이상을 앗아가 버렸다. 이제 좌파들은 자본주의와는 다른 대안을 생각할 수 없다는 듯이 그때그때의 전투들과 전술들에만 매몰되는 경향이 있다. 그나마 그조차 투쟁적이고 좌파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이 한창이던 동안에 진보·좌파 진영의 대부분은

노동자들 고유의 계급적 투쟁을 고무하기보다는 주로 대선 대응에 관심을 기울였다. 정권의 부패에 반대하는 투쟁은 민주주의 투쟁인데, 그 투쟁 참가자의 다수인 노동자들이 민주주의 투쟁을 하면서도 계급투쟁을 겸해서 해야 사회주의 운동 건설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 레닌과 러시아 혁명의 교훈이었다.

그러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노조 조직 확대와 사회민주주의 정당 성장 정도의 성과에 머무르게 된다. 이것은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 만족할 일은 아니다. 경제 위기 시대에 거둬드는 사용자들과 정부의 공격에 직면해 결국 한계를 드러내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1백 년 전의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과 혁명 러시아의 노동자 계급이 품었던 이상과 이념, 전망을 회복해야 한다. 회복을 위한 노력은 지금 여기에서 사회주의 조직 건설에서 시작돼야 한다.

※ 이 글은 필자가 얼마 전에 한 어떤 강연의 원고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은 노동자 계급과 피억압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공무원·금속·건설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이메일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중고등학교 | ☐ 기타)

[선택] 휴대전화번호

회비/약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사드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문재인 앞에 던져질 트럼프의 초고액 청구서

김영익

4월 26일 사드의 핵심 장비들이 성주로 들어갔다. 대선 기간에, 그것도 전날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이 사드 문제로 공방을 벌인 지 불과 12시간도 되지 않은 때에 말이다.

이로써 문재인은 집권하자마자 사드 배치가 일으킨 지정학적 파고에 직면하게 됐다. 사드가 배치돼 중국·러시아·북한의 대응과 미국의 추가 조처가 맞물리면서 한반도를 두고 제국주의 간 갈등이 악화할 것이다.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의 핵심 무기이고, 사드 배치로 한국은 (2012년 한국 국방부가 스스로 밝힌 기준에 따르면) 사실상 미국 MD에 편입된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는 사드 배치를 전후해 한국의 MD 편입을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4월 26일 미 태평양사령관 해리 해리스는 “완전히 통합된 탄도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목표로 일본, 한국, 호주와 함께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중국이 MD의 타깃임을 분명히 했다.

MD 편입을 공식화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더 많은 기여와 협력을 요구하려는 것이다. 그중에는 SM-3 미사일 등 더 많은 MD 자산의 도입이 있을 것이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한·미·일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하나의 국가처럼 [중국을 겨냥해] 공동의 작전을 실행할 수 있는 공동방위”(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지적)이다. MD는 한·미·일의 다자 협력 체제를 발전시킬 중요한 수단이다.

사드의 성주 배치 이후 한·미·일의 정보 공조 체계가 구축되면, 지휘·통제의 일원화가 그다음 수순이다. 즉, “한·미·일의 미사일방어 작전을 지휘·통제하는 단일 지휘관이 출현할 날도 멀지 않았다.”(김종대)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 ‘위안부’ 합의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된 문제라고 봐야 하는 까닭이다.

트럼프는 문재인 정부에 확실한 군



문재인은 사드 배치를 즉각 철회하라 성주 주민들이 사드 부지로 몰래 유류를 반입하던 차량을 막고 팻말을 설치했다

사비 분담도 요구할 것이다. 한국이 사드 비용 10억 달러(약 1조 1천3백억 원)를 내야 한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단지 일회성 돌출 행동이 아니다. 트럼프는 동맹국이 군사비에 더 많은 돈을 써서 미국의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그래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소속 국가들에게 GDP 대비 2퍼센트까지 군사비를 증액하라고도 촉구했다.

4월 30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맥매스터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미국 대통령의 말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의 ‘10억 달러’ 주장을 옹호했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한국 등 동맹국의 “적절한 책임 분담”을 언급했다. 즉, 미국은 사드 비용,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 국방비를 대폭 증액해 한국이 미국 주도의 “집단 방위”(맥매스터의 표현)에 더 많이 ‘기여’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처럼 트럼프 정부는 사드 배치 강행을 시작으로 한·미·일 동맹 강화, 국방비 증액 등 까다롭고 비싼 청구서들을 문재인 정부에 들이밀려고 한다.

미·중 갈등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은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력적 관계도 유지한다’는 ‘모범 답안’을 얘기해 왔다. 이런 노선은 전임 정부들도 천명해 온 것이다. 전임 정부들 하에서 이는 결국 한미동맹 강화로 귀결돼 왔다. 박근혜도 처음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뜬 들이다가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협력하는 것으로 치달았다.

문재인은 “동북아 책임공동체” 형성, 중국과의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동시에 한미동맹이 “혈맹”이자 외교·안보의 기축이라고도 강조한 다. 외교·안보 정책 안에 서로 상충하

는 요소들이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악화해, 한국의 처지에서는 운신의 폭이 많이 좁아진 상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적 관계 유지와 트럼프의 대외정책 협력 사이에서 고심하다가 결국 미국에 타협할 공산이 크다. 한국 국가를 책임진 처지에서, 미국의 패권이 유지되는 한 한미동맹을 통해 ‘국익’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한국 지배계급의 요구를 외면하기 힘들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이 ‘사드 배치 철회’를 한사코 얘기하지 않고 차기 정권에서 검토할 문제라고만 하며 국회 논의와 동의 절차를 강조하는 까닭이다. 물론 이미 사드가 들어온 마당에 국회 논의는 시간만 오래 걸리고 별 소용도 없는 사후 약방문 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최악의 경우, 국회 동의 절차는 사드 배치를 사후 정당화하는 구실을 할 수 있다.

남북 관계와 ‘자주 국방’

남북 관계에 관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렇게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대북 압박과 남북관계 개선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동맹만 강화하며 임기를 마칠지 모른다.

또한 문재인은 ‘자주 국방’을 강조하며 GDP 대비 현 2.4퍼센트 수준에서 3퍼센트로 국방비를 늘린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4월 27일 방송기자클럽 토론). 그런데 ‘자주 국방’을 위한 국방비 증액은 트럼프 정부의 ‘책임 분담’ 요구와 맞물린다. 한미동맹 하에서의 ‘자주 국방’이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이 제시한 목표대로 국방비를 증액하려면 임기 말까지 현 수준(40조 원)에서 15조 원가량 더 늘려야 한다. 그래도 미국이 내심 원하는 미국 수준의 국방비 지출 수준(GDP 대비 3.3퍼센트)에는 못 미친다.

김종대 의원은 2010년 출판된 한 저서에서, 자신이 청와대 국방보좌관실에서 일했던 2004년 당시 노무현 정부가 ‘자주 국방’을 위해 정부 전체 예산 증액분의 80퍼센트를 국방부에 줬다고 술회했다. 그 바람에 “적어도 복지 지출로 편성하려던 예산 중 1조 5천억 원이 국방비로 넘어갔다.” 그때에 견줘 경제성장률이 떨어져 재원 마련이 더 어려워진 오늘날, 국방비를 대폭 늘릴수록 복지와 일자리 마련에 쓸 돈은 더 줄어든 것이다.

정권 교체는 한반도 평화 체제 실현의 전기가 되지 못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등에서 미국에 타협한다면, 평화를 바라며 투표소로 향했을 많은 민중이 크게 실망하고 분노할 것이다.

좌파는 문재인 정부의 친제국주의와 친군국주의 정책에 반대해야 한다. 사드 배치 즉각 철회 운동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노동자 연대〉는 마르크스주의로 세계를 분석합니다.

- ▶ 투쟁하는 노동자와 노동자 연대를 건설하는 사람들의 신문
- ▶ 차별과 억압에 맞서 대안을 제시하는 신문
- ▶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논쟁적인 신문
- ▶ 국제적 저항과 운동 소식을 좌파적 관점에서 전하는 신문
- ▶ 저항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신문
- ▶ 독자들이 판매자이자 기고자이고 후원자인 신문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wspaper.org**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26개 호) 5만 원, 2년(52개 호) 10만 원

신청 : 02-777-2792, 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통협 301-0010-1643-71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구독기간 ☐ 1년 (26개 호) 50,000원	
☐ 2년 (52개 호) 100,000원	
☐ 2년 이상 ()년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보내 주세요. 담당자가 확인한 후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 ws@wspaper.org	